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연구 결과 발표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I | 들어가며

불평등 문제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OECD(2011)은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수십년 동안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불평등의 심화는 교육, 건강,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통합도 저해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강변했던 IMF나 World Bank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현재의 불평등 수준 아래에서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Berg, Ostry, Tsangarides, & Yakhshilikhov, 2018).

불평등의 심화는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와 기후위기 의제와도 연결된다. 복지국가에서 전통적인 좌·우 정당들은 70년대 이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다수의 복지국가에서 불평등은 21세기 들어서도 심화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그림 1] 참고). Piketty(2014)는 과거에는 정치적 분열이 노동자 대 자본가 사이에 있었지만, 현대에는 엘리트 그룹을 분점하는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사이에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엘리트 그룹 사이의 대립 혹은 적대적 공생 속에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전통적인 노동계급은 소외되면서 극우 포퓰리즘의 토대가 확대되고 있다. 노대명(2025) 역시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극우 급성장의 배경으로 불평등을 지목했다. 김병권(2024)은 현재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 나타나는 소득 및 지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대규모 탄소 배출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불평등의 양상은 세계적 보편성과 더불어 고유성이 있다. 한국은 시장에서의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국가에 의한 재분배 기능이 약한 점, 지난 2010년대 이후에는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가 꾸준히 완화됐다는 점([그림 1] 참고), 후발 복지국가로서 다수의 제도가 도입·안착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 등에서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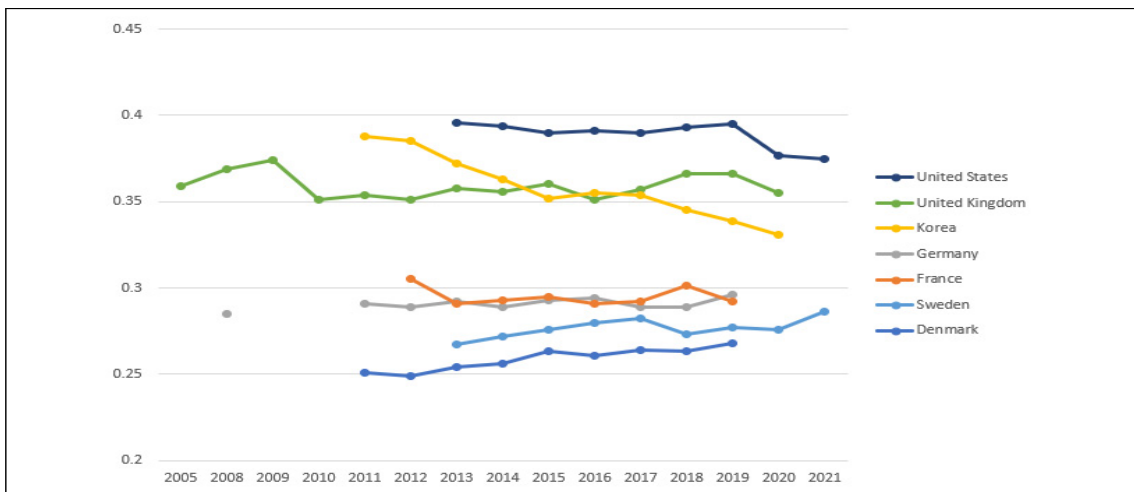
복지국가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불평등 수준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그림 2) 참고).

특히, 성별, 연령의 관점에 본 한국의 불평등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를테면, 노인 빈곤율 및 남녀 소득 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렇듯 불평등의 단면을 달리 보면, 다른 차원의 불평등 양상이 새로이 관찰된다. 해외에서도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주목하고, 소득, 교육, 건강(Kelly, 2006; Lugo, 2005), 소득을 제외한 주거, 교육, 건강(Araar, 2009), 소득, 소비, 자산(Wroński, 2021)을 포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됐다.

국내에서의 다차원적 불평등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백승주, 금현섭(2013)이 소득·교육·건강의 세 차원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이용하여, 불평등의 차원별 기여도를 산출한 바 있다. 정해식, 김수완, 안상훈(2014)이 소득, 교육, 건강, 주거자산의 맥락에서 다차원적 불평등의 세대간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두 논문의 선구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년 넘은 연구이며, 일회성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해외에서는 다차원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점과는 대조적이다(Barbabela et al., 2022; Foster & Lokshin,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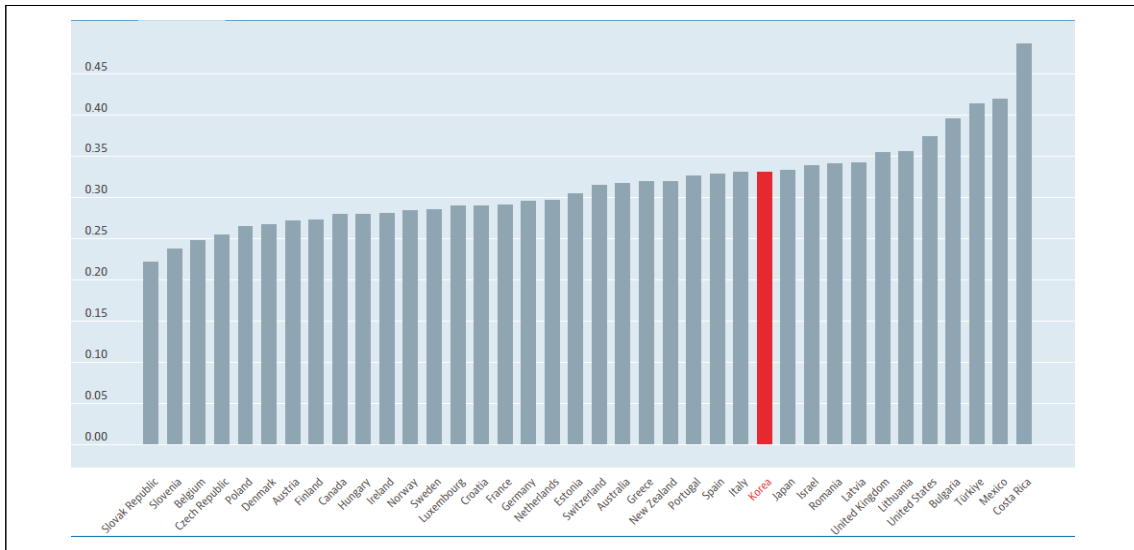
이번 연구는 한국의 불평등의 양상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불평등을 네가지 영역, 즉 소득, 자산, 교육, 건강의 측면에서 파악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산출하고,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추이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한국의 다차원 불평등 양상의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구축, 연계, 활용에 관한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그림 1] OECD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지니 계수 추이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각 년도.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그림 2] 한국과 OECD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주: 국가별로 기준 시점은 상이하며 2018~2021년 사이에 분포함. 한국은 2020년 기준이며 지니계수는 0.331임.
 자료: OECD, 「Income Inequality」. <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

II | 불평등의 다차원성 검토

1. 다차원 불평등의 개념 및 연구의 필요성

불평등 연구는 전통적으로 단일 차원 지표, 주로 소득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 졌다(Araar, 2009). 개발도상국 대상 불평등 연구에서 복지의 다차원적 특성을 인정하는 분배 분석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Araar, 2009). 이러한 태도는 이른바 복지국가에서의 불평등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로 등장했다. 다수의 재화와 서비스가 쉽게 화폐화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행복이나 기대수명과 같은 비화폐적 측면이 중요한 선진국에서도 그러하다(Araar, 2009).

Sen(1982)에 의한 역량이론은 다차원 불평등 개념에 증대한 기여를 했다(Araar, 2009 재인용). Sen의 이론은 자원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개인의 이점을 평가할 것을 강조하며, 단순한 자원 보유 수준을 넘어서 개인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자유와 역량에 초점을 둔다(Sen, 1982; Araar, 2009 재인용).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후생 수준은 심각하게 떨어질뿐더러, 앞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적인 역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을 모니터링할 필요성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비화폐적 차원의 분포에 존재하는 불평등 자체를 측정할 필요성

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더라도 그 분배가 불균등하다면 전반적인 복지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Araar, 2009). 이러한 관점은 개인 복지가 다면적이며, 물질적 생활 수준은 그중 하나일 뿐이며, 비화폐적 차원은 화폐의 차원과 자주 무관함을 의미한다.

다차원 불평등의 개념화는 복지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건강, 심리적 차원을 포괄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Barbabela et al., 2022). 이러한 확대된 관점에 따르면 다음의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된다. 모든 형태의 불평등이 단일한 근저에 있는 하나의 차원의 표현인가? 따라서 사회는 전반적으로 평등하거나 불평등한가? 혹은 서로 다른 불평등 차원들이 서로 무관하며 상이한 요인에 의해 구동되는가? 나아가 사회는 서로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상쇄할 수 있는가? 즉, 정치적·사회적 지위의 평등성이 확보된다면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는가? (Barbabela et al., 2022, p. 45). 화폐 중심의 불평등 이론을 다차원적으로 확장한 결과, 불평등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의 장이 열리면서, 동시에 질문은 꼬리를 물게 됐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다차원 불평등의 양상 및 상호관계에 주목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다양한 불평등들이 서로 인과 및 상호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① 핵심 불평등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즉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면 다른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② 개별 불평등 문제를 서로 독립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개별적인 해결 방식을 취하거나, ③ ①~②의 중간 정도에서 혹은 ④ 제 3의 방식의, 학술적 분석 혹은 정책적 대응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다차원적 불평등에 대한 접근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득 중심 사고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다. 인간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된 지표가 1인당 GDP 등 소득이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에서 교육, 건강, 관계 등 비물질적 차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인도계 후생경제학자인 Amartya Sen이 있다. 앞서 논의한 Sen(1980)의 역량이론은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주도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의 개발로 이어졌다(Sen, Anand, 1994). 인간개발지수는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GDP만으로 가늠했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사회의 성원들의 건강 및 교육, 소득 수준을 종합해서 반영한 결과물이다. Stiglitz, Sen, Fitoussi(2009)가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의 요청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인간의 웰빙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p. 14)이라고 선언하면서, 모두 여덟 개의 차원이 “동시에(simultaneously)” (p. 14)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여덟 개 차원은 ① 물

질적 생활 수준(소득, 소비 및 부), ② 건강, ③ 교육, ④ 개인 활동(일 포함), ⑤ 정치적 목소리와 거버넌스, ⑥ 사회적 연결과 관계, ⑦ 환경(현재와 미래 조건), ⑧ 경제적 및 신체적 불안정성으로 제시됐다.

OECD(2011)가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핵심지표로 제시한 ‘Better Life Index’에서도¹⁾ 웰빙을 구성하는 요소로 다음의 11가지를 제시했다. ① 소득 및 부, ② 직업 및 소득, ③ 주거 조건(Housing Conditions), ④ 건강 상태, ⑤ 일과 삶의 균형, ⑥ 교육 및 기술, ⑦ 사회적 연결, ⑧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⑨ 환경 품질(Environmental Quality), ⑩ 개인 안전, ⑪ 주관적 웰빙이다. 불평등의 측정에서도 이러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소득과 다른 지표와의 비동조화도 관찰된다. 과거에는 소득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단일한 변수로서 의미가 컸다. 소득이 올라가면 삶의 질과 건강 등 다른 지표들도 자연스럽게 개선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 평균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다른 지표와의 비동조화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가 유명한 ‘Easterlin Paradox’나 ‘Wilkinson hypothesis’다. Easterlin Paradox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서 행복은 국가 간 및 국가 내에서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변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복과 소득의 성장을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Easterlin, O’Connor, 2020). 이러한 주장도 분석 대상 국가, 분석 자료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Stevenson, Wolfes, 2008), 과거 고도성장 사회 특유의 소득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게 하는 데 일조한 역할이 크다. Easterlin의 역설은 인간의 삶에서 비경제적 요인, 즉 사회적 신뢰나 건강, 환경의 요소를 제고하는 데 일조했다. Wilkinson의 가설도 크게 보면, Easterlin Paradox와 유사하다. Wilkinson & Pickett(2009)는 국가 간 국제 비교 및 미국 주간 비교분석을 통해서 소득과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과 건강 결과 사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 수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제언이었다. 이러한 가설에 반하는 분석(Baek & Kim, 2018)도 적지 않게 제기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길이 소득 증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학계에서 이견이 없다.

셋째,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돌봄이나 외로움과 같은 관계의 의제가 정책적 및 학술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전통적인 관심은 이른바 ‘구사회적 위

1) OECD(2011)도 ‘Better Life Index’의 생성에서 “Stiglitz et al. (2009)의 제안에 밀접하게 의존”(p. 18)했다고 명기하고 있다.

험'이라고 일컬어지는 상병, 실업, 은퇴, 산재 등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공통점은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결국 위험에서 비롯되는 빈곤화를 막거나, 이미 빈곤해진 가구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21세기에 들어선 복지국가는 돌봄, 고립, 은둔, 외로움, 관계 단절 등과 같은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여성 노동 시장 진출 증가,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정에서의 돌봄 및 여가 수요 충족 기능의 저하다. 둘째, 생리적 욕구 및 경제적 안정 욕구가 보장된 인간이 자연스럽게 바라는 사회적 욕구 및 존경 욕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Maslow(1943)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다섯가지 욕구(생리적 욕구, 신체적·경제적 안정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데, 선행 욕구가 충족돼야 후행욕구를 순서대로 충족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인정 혹은 관계 문제는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는 참여, 돌봄, 외로움과 같은 보다 미세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개별적인 불평등을 주목하는 대신, 다차원적 불평등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다양한 불평등의 기저에 작용하는 동적인, 그리고 인과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 이를테면, 소득 불평등을 결과로 본다면,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확대 혹은 감소를 초래한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건강, 교육, 노동, 성별 등 다양할 수 있다. 이는 불평등의 순환 고리를 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 다차원 불평등의 이론적 총합에서 어느 차원의 불평등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지를 파악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또한, 다양한 불평등이 특정 인구집단에 중복적으로 누적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한정된 자원으로 정책개입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킥핀'을 찾아야 하는 필요와 직결된다.

다섯째, 다차원적 불평등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다양한 불평등 지표들을 묶어서 단일 지수화함으로써, 전체 불평등의 양상을 한눈에 확인하고 싶은 욕구와 연관된다. 앞서 살펴본 인간개발지수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견해도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다차원적인 현실을 1차원적인 하나의 지수로 요약하려는 지표의 속성상 어느 정도의 불투명성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탄소 배출, 소득 불평등, 의료, 교육 등등에 대해 분명하고 투명하게 알려주는 복수의 지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Piketty, 2014, pp. 52-53).

다차원 불평등 개념을 활용한 접근이 가질 잠재적인 한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 불평등이 분산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평등의 동적인 관계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개념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빈곤이나 사회적 이동 개념이 불평등의 대물림, 악화, 확대, 악순환을 분석하고 관련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기에 적절할 수도 있다. 인간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다차원적이라는 점을 수용하더라도, 다차원 뒤에 붙는 개념이 불평등일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의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불평등의 어떠한 면모에 학술적·정책적인 관심이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혹은, 다차원 불평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불평등의 면모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역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역별 불평등 현황 및 추이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다차원 불평등 현황과 추이 분석이 필요하다. 다차원 불평등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서 관찰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차원 불평등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영역별 불평등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할 필요가 있다. 영역별 분석은 다차원 분석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증기적으로는 한국의 다차원 불평등 현황과 추이를 유럽 등 다른 복지국가와 국제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책적 함의점을 모색할 수 있다. 아울러, 다차원적 불평등 통계 분석을 통해서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생산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2. 다차원 불평등 관련 선행연구

Bersisa & Heshmati(2021)는 에티오피아에서 농촌 및 소도시 지역의 단일·다차원 빈곤과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소비지출, 교육, 건강, 주거, 자산, 에너지 총 6개의 차원을 다중대응분석(MCA)을 통해 영역별로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단일 차원 기준으로는 36%가 빈곤층이었으나, 다차원 기준으로는 80%가 빈곤층이었다. 농촌(89%)이 도시(43%)보다 훨씬 높은 다차원 빈곤 수준을 보였으며,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보다 빈곤율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필자는 보편적 정책은 비효율적이며, 지역 및 인구 특성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Wroński(2021)는 EU 21개국의 소득, 자산,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차원 불평등을 측정했다. HFCS(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자료를 사용하고, Araar(2009)의 지수를 적용하여 각 차원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했다(Wroński, 2021, p.573, 591).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 불평등이 전체 다차원 불평등에서 가장 큰 기여(49~60%)를 했고, 다음이 소득, 소비 순이었다. 전반적 다

차원 불평등의 국가 간 차이는 미미했으며, 단일 차원의 지니계수보다는 차이가 작았다. 가구의 소득, 자산, 소비 위치 간 상관성은 국가마다 상이했으며, 자가 소유율, 중간소득 수준, 단일 불평등 수준과 연관이 있었다.

Barbabela, Pellicer, and Wegner(2022)는 98개국을 대상으로 다차원 불평등 구성을 국제비교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들은 WIID(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의 소득 불평등 자료, WHO 생명표의 건강 불평등(기대수명), 그리고 국제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 참여, 정치적 영향력 인식, 자기효능감, 사회계층 인식에 대한 불평등을 통합하였다. 모든 변수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불평등을 측정하면서, 주성분분석(PCA)을 통해 불평등의 근본 축을 추출했다. 이들은 크게 보아, 다음의 두가지 차원의 불평등의 근본 축을 판별했다. 두가지는 사회경제·심리·건강 불평등(소득, 건강, 사회계층, 자기효능감 간의 강한 연관성을 보이며 전체 변동의 절반가량을 설명)과 정치적 불평등(정치 참여와 정치적 영향력에서의 불평등을 반영)이었다. 분석 대상 국가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다차원 불평등을 분석한 연구는 희소하다. 백승주, 금현섭(2013)과 정해식, 김수완, 안상훈(2014)이 국내의 다차원 불평등 현황을 분석한 ‘유이한’ 사례다. 두 논문 모두 복지패널을 사용했다. 백승주, 금현섭(2013)은 소득, 교육, 건강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이론적 지수들(Maasoumi, Bourguignon, Araar)을 적용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구성 차원별 기여도는 서로 상이하였다. 정해식 외 (2014)는 다차원 불평등을 세대 간 차이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즉, 이들은 노인 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로 구분하고, 소득, 교육, 건강, 주거자산 네 차원을 기준으로 Araar(2009)의 지수를 활용한 다차원 불평등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논문의 자료 및 분석 방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선행연구의 자료 및 분석 개요

		정해식, 김수완, 안상훈 (2014)	백승주, 금현섭(2013)
데이터		• 복지패널	• 복지패널
데이터 선택의 이유		소득, 교육, 건강, 주거 “네 차원의 관련 변수가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 상태 등의 자료와 함께 제시” (p. 348)	“소득, 교육, 건강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 대한 조사문항이 동시에 포함된 자료”(p. 294)
영역	소득	•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 (연, 만원)	• 가구의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은 가구주의 소득으로 합산, 가구원에게는 근로(사업)소득만
	교육	• 교육년수	• 교육년수(year of schooling)
	건강	• 건강만족도, 우울척도, 음주, 장애, 만성질환을 최소최대 정규화한 뒤 산술평균	•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건강만족도, 심리적 건강으로서 우울척도(CESD-11), 음주수준, 장애 등급, 만성질환. • 다중대응분석(MCA: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활용하여 단일값 산출
	주거	• 주거자산으로 거주주택 가격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또는 보증금)	• 주거는 포함하지 않음.
다차원의 정규화 과정		• 상이한 불평등 지표를 정규화. 최소-최대 정규화 (Min-Max Normalisation Methods) ※ 극단값 제거 위해 99%값 활용	왼쪽과 동일. ※ 극단값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결론		• 소득과 교육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노인세대는 소득, 교육, 건강의 차원에서 가장 낮은 자원 수준을 보임 • 세대별 다차원적 불평등 기여도는 현 노인세대의 경우에는 교육 차원, •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소득과 건강 차원,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경우에는 주거자산 차원이 불평등에의 기여 정도가 높음	• 다차원 불평등 지수 2005~2011년 감소 추이 • 소득 불평등의 기여도가 절반 가까이로 높음 • 지역으로 나눠보면, 도시에서 건강 불평등 기여도가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III¹ 다차원 불평등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분석의 자료는 복지패널을 활용했다. 복지패널은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연령별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를 평가” (한국복지패널, n.d.)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단위로 수집된 패널자료다. 가구용/가구원용/부가조사표로 나뉘어서 조사가 수행되며, 가구용 조사표를 보면, 가구 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경제활동 상태, 사회보험 가입/퇴직금제/개인연금 가입, 주거, 생활비, 소득, 부채 및 이자, 가구 재산, 생활여건 등 거의 대부분의 불평등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다차원 불평등을 분석한 두 차례의 선행연구(백승주, 금현섭, 2013; 정해식 외, 2015)에서 복지패널을 사용한 이유도 복지패널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연구진에서도 다차원 불평등 분석을 위해서 국내의 다양한 자료 및 행정자료의 연계 가능성까지 두루 검토했으나, 2025년 현재 시점에서 복지패널을 능가하는 자료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석 시기는 2011년부터 2023년의 13년의 시기를 대상으로 했다. 2025년 분석 수행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는 2024년에 실시된 19차 복지패널 데이터다. 참고로, 2024년 수행된 19차 복지패널 자료는 대부분 전해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분석 대상의 시기는 복지패널 7~19차의 2011년~2023년이다.

분석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이전 국내 선행연구에는 모두 15세 이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지만(백승주, 금현섭, 2013 등),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중·고등학생 연령대 개인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특히, 교육연수가 교육 불평등의 지표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민법에서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하는 점도 참고했다.

세대 구분은 2025년 기준으로 60년 이전 출생자, 즉 65세 이상 인구는 노인세대로, 그 아래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주기로 586세대(61~70년생), X세대(71~80년생), 밀레니얼 세대(81~90년생), Z세대(91년 이후 출생)로 구분했다. 이들은 각자의 생애주기에서 한국의 성장과 불평등의 국면을 다르게 맞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 한국의 세대별 사회경제적 변화 추이

(단위: 기간 평균, %)

차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경제성장률	10.27	8.64	6.68	4.43	4.0
실업률	4.00	3.51	3.47	3.62	3.31
임금상승률	8.87	9.07	4.85	3.94	-
주택가격 상승률	-	8.05	0.68	5.36	2.93
사회경제적 사건	독재정권 빈곤탈출	민주화운동 고도성장	외환위기 OECD 가입	민주화 불평등심화	저출생 저성장진입
교육 및 복지제도	의료보험 도입	중학교 의무교육 국민연금 도입	고용보험 도입 국기초 도입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무상급식 실시

주: 정해식 외(2015) 표 1의 내용 일부 수정함

2. 변수의 측정

소득은 균등화가구가처분소득을 활용했다. 분석의 대상은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가구균등화과정에서는 19세 미만 가구원도 포함했다. 교육 변수는 교육연수

를 활용했다. 개인별로 최종 졸업한 학교까지 누적 교육 연수에 현재 추가 교육 과정 학적 상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해서 교육 연수를 구했다. 여기서 가중치는 재학·휴학·중퇴는 0.5²⁾, 수료는 0.7, 졸업은 1.0이다. 이를테면, 대학 중퇴의 경우, 교육연수는 14년(초등6년 + 중등 3년 + 고등 3년 + 대학 2년)이다.

건강 차원에서는 네가지 변수를 활용했다. ① 주관적 건강 수준, ② 우울 정도, ③ 음주, ④ 만성질환을 활용했다³⁾. 네가지 변수가 모두 서열적 범주형 변수이고, 수치적 순서가 명확한 점을 고려해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서 건강차원의 종합지수를 생성했다. 물론, Araar(2009)나 백승주, 금현섭(2013)은 복수의 범주형 변수를 다차원 불평등지수를 위해 활용할 때,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활용해서 분석 단위의 효용점수(utility score)를 산출했다. 이번 연구는 네가지 변수가 위계적 서열 변수인 점을 고려해서 대안적으로 주성분분석을 사용했다.

자산의 경우, 균등화가구 순자산(net wealth)을 활용했다. OECD(2015)에 따르면, 자산 지표의 활용에서 “불평등 지표는 순자산(net wealth)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유의미하다”(p. 170). 총자산(gross assets)은 금융 및 실물 자산을 모두 포함하나, 그 자산이 부채로 상쇄되는 부분이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력은 왜곡된다. 예컨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총자산은 높지만, 거액의 모기지 부채가 있으면 실질적 경제력은 크지 않다. 복지패널에서 순자산을 분석에서 활용한 박호준, 박정민(2021)의 사례도 참고했다. 다만, 이들은 복지패널 자산 및 부채 항목을 구하는 산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번 분석에서는 복지패널에서 총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기타 자산 등 25개 항목을 합한 값)에서 총부채를 제외하는 방식을 취했다. 모든 자산값은 양수였다.

복지패널에서 가구의 부채액은 ① 금융기관 대출액, ② 일반사채, ③ 카드빚, ④ 전세보증금, ⑤ 외상 및 미리 받은 깃돈, ⑥ 기타 부채를 합해서 산출했다. 모든 부채액도 양수였다.

분석 과정에서 극단치가 발견됐다. 소득과 재산 자료는 극단치가 흔하게 발견된다(OECD, 2013). 이러한 극단치는 극단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인지, 이상치인지 판단하기 쉽지는 않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극단치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 연

2) 정해식 외(2015)는 중퇴에 0.7 가중치를 주고, 백승주, 금현섭(2013)은 적시하지 않았으나, 중퇴가 휴학과 재학과 다를 이유가 없어서 중퇴는 0.5로 간주했다.

3) 정해식 외(2015), 백승주, 금현섭(2013)은 모두 장애등급을 건강 변수로 활용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19차 복지패널 자료를 보면, 장애가 있는 개인의 비율은 6.75%로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두 선행연구에서는 흡연도 같은 이유로 제외했다.

구에는 대체로 남겨졌다. 이유는 두 가지다. 소득과 자산을 제외하고는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의 경우에는 일부 극단치가 있었지만, 모두 남겼다. 복지패널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균등화소득수준은 평균치의 81.7배였다.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의 경우에는 극단값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복지패널 2차에서는 총자산액이 6000억원인 극단값이 존재했다. 물론, 자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하나의 사례가 전체 평균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었다. 불평등 연구에서 이러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하단 혹은 상단 코드를 설정해서 계산식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극단값 대체 기법(winsoring)을 사용한다(LIS Datacenter, n.d.). 이번 연구에서는 가구 자산 및 부채에 한해서 상위 1%에 한해서 1%의 경계값을 부여했다(〈표 VI-3〉 참고). 순자산의 경우, 상하위 1%에 대해서 각각 1%의 경계값을 부여했다. 자산과 부채는 하한값이 0인데 비해, 균등화가구순자산은 최소값도 -10억을 밑돌았기 때문이었다.

[표 3] 연도별 가구균등화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상위 1% 경계값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산	9.26	9.06	9.33	9.22	9.90	10.59	12.08	11.55	13.00	16.15	16.86	19.68	16.63
부채	2.48	2.35	2.50	3.41	3.46	3.49	3.45	3.75	4.05	4.47	5.02	4.91	5.01

[표 4] 불평등 차원별 변수의 측정 및 기초 통계량 (2023년 기준)

차원	변수	측정방법	평균 (표준편차)	최대/최소
소득	• 균등화가구가 처분소득 (단위: 연기준 만원)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4395.62 ¹⁾ (2685.62)	0/35,105.21
교육	• 교육 과정 및 학적(學籍) 상태에 따른 교육 추정 기간 (단위: 년)	• 개인별로 최종 졸업한 학교까지 누적 교육 연수 + 현재 추가 교육 과정 학적 상태에 따른 가중 연수 ※ 재학·휴학·중퇴는 0.5, 수료는 0.7, 졸업은 1.0 가중	12.76 (3.63)	0/22
건강	• 주관적 건강	• 건강만족도 (1.건강 아주 안 좋음 ~ 5. 건강 아주 좋음)	3.67 (0.86)	1/5
	• 우울 정도	• 식욕이 없음 등 11개 문항 1(극히 드물었다)~4(대부분 그랬다) 가운데 부정 정서를 묻는 아홉 문항은 역코딩함 ※ 합계 점수가 높으면 건강.	41.16 (4.03)	11/44

차원	변수	측정방법	평균 (표준편차)	최대/최소
	• 건강행동 (음주 수준)	• 음주 횟수 (1:주4회이상 ~ 5:전혀 안마심) ※ 점수가 높으면 건강이 좋도록 코딩 조정.	3.78 (1.30)	1/5
	• 만성질환	• 0: 비해당~: 3: 6개월 이상 투병/투약 역코당함. ※ 점수가 높으면 건강	1.64 (1.46)	0/3
자산	• 균등화 가구 순자산(만원)	• 균등화가구 총자산: 복지패널에서 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기타 자산 등 25개 항목을 합한 값. ※ 해마다 상위 1% 극단값은 1% 경계값으로 대체해마다 상위 1% 극단값은 1% 경계값으로 대체	(1%값 대체 이전) 16,134.25 (32563.34) (1%값 대체 이후) 15495.32 (27999.05)	(1%값 대체 이전) 0/501,748.8 (1%값 대체 이후) 0/166262
		• 균등화가구 총부채: ① 금융기관 대출액, ② 일반사채, ③ 카드빚, ④ 전세보증금, ⑤ 외상 및 미리 받은 것돈, ⑥ 기타 부채를 합해서 산출. ※ 해마다 상위 1% 극단값은 1% 경계값으로 대체	(1%값 대체 이전) 5,142.92 (11,286.89) (1%값 대체 이후) 4,857.40 (8,770.75)	(1%값 대체 이전) 0/191,000 (1%값 대체 이후) 0/50,079.36
		• 균등화 가구 순자산: 균등화가구 총자산 - 균등화가구총부채 ※ 해마다 상위 1% 극단값은 상위 1% 경계값으로 대체	(1%값 대체 이전) 10,991.33 (28,696.23) (1%값 대체 이후) 10,456.79 (23,763.42)	(1%값 대체 이전) -101769.5 /501748.8 (1%값 대체 이후) -19026 /140954.3

주1: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은 모든 연령대의 가구원을 포함해서 산출했으나, 평균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은 조사 대상인 19세 이상의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의 평균액이다

3. 분석 방법

다차원 불평등(Multidimensional Inequality)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론은 Araar(2009) 등의 다차원 지니계수 방식과 Chakravarty et al. (1998) 등의 지표 평균 접근법, 그리고 Theil·GE(Generalized Entropy) 계열의 불평등지수를 다차원화한 다차원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Multidimensional Generalized Entropy Index) 등이 있다. 이들은 소득 불평등 등으로 단일하게 이해되던 불평등지표를 교육, 건강, 주거 등에 걸쳐 측정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Araar(2009)의 Hybrid Multidimensional Index(H-MDI)를 사용한다. 다차원 불평등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위있는 지수인 점을 고려했다. Araar(2009)

는 상대적/절대적 불평등, 소득 및 비화폐적 차원, 차원 간 상관성(CIM) 등을 반영한 혼합형 다차원 불평등지수를 제안했다. Araar(2009)가 제안한 혼합형 다차원 불평등지수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I = \sum_{k=1}^K \varphi_k [\lambda_k I_k + (1 - \lambda_k) C_k]$$

φ_k = 차원 k에 기인한 가중치

λ_k = 차원 사이의 민감도

I_k = 차원 k의 지니계수

C_k = 소득 분포에 대한 차원 k의 집중지수

I = 지수의 총합으로 산출된 다차원 불평등 지수

산출식을 하나씩 풀어보자. I_k 는 구성요소 내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다. 이를테면, 건강 불평등을 지니계수로 표현한 것이다. C_k 는 구성요소 k의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다. 해당 구성요소의 값이 소득 순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측정한다. 예컨대 부유할수록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건강한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λ_k 는 구성요소별 불평등과 소득(또는 순위) 불평등 간의 사회적 민감도를 반영한다. λ_k 가 1에 가까우면 I_k 에 더 민감함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구성요소 기반 평가를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λ_k 가 0에 가까우면, C_k 에 더 민감함을 의미하고, 소득 기반 평가가 강조된다. φ_k 는 불평등 지수 산출을 위해 특정 차원에 부여하는 가중치다. 이를테면, 전체 다차원 불평등에서 건강 불평등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크다고 하면, 전체 다차원지수 산출 과정에서 $\varphi_{건강}$ 의 값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정 차원에 가중을 둘 근거가 따로 제기된 바가 없으면, 영역별 가중치를 동등하게 부여했다. 식에 따르면, 한 차원의 불평등이 감소하면 다른 차원의 불평등이 일정할 경우, 전체 지수가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차원간 소득 불평등과의 상관관계가 증가하면 C_k 가 증가하면서, 전체 H-MDI도 증가하게 된다.

IV | 다차원 불평등 분석 결과

1. 차원별 불평등 정도

[표 5] 차원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

(단위: 지니계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	0.31	0.31	0.33	0.32	0.36	0.31	0.30	0.30	0.29	0.29	0.30	0.29	0.30
교육	0.15	0.15	0.15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3
건강	0.13	0.12	0.13	0.13	0.12	0.13	0.12	0.13	0.13	0.13	0.13	0.13	0.12
자산	0.23	0.22	0.21	0.23	0.25	0.26	0.27	0.27	0.29	0.32	0.34	0.35	0.3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차원별 불평등의 정도 및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표 5〉 참고). 소득, 교육, 건강은 2011~2023년 기간 동안 모두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자산의 지니계수는 경향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그려진다. 소득의 경우, 앞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복지패널에서는 완만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두 자료 모두에서 서구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교육 수준의 불평등은 지니계수가 0.15로 매우 낮았다. 원 보고서의 5장의 분석을 보면, 세대 간 교육연수 격차는 크게 완화되어 양적 불평등은 해소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1980년대생 이후에 양적 불평등은 상당히 해소됐다는 것이 분석의 결과였다. 교육의 양이 아닌 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가용한 데이터가 있고, 이를 측정했다면 교육 불평등의 양상은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건강 불평등 수준도 다른 영역과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부분 역시 해석에서 주의를 요한다. 건강 불평등의 지니계수가 낮았던 배경에는 건강 불평등을 측정하는 척도의 폭이 넓지 않았던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건강에서 주관적 건강이나 음주 횟수는 5점 척도를 활용했다. 건강 수준이 좋아도 소득과 같은 극단치가 나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참고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복지패널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균등화소득수준은 평균치의 81.7배였다. 그렇지만, 주관적 건강 수준의 최대값은 5점이고, 평균값은 3.67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니계수를 영역별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표 5〉에서 지니계수는 영역별로 추이를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경향을 뚜렷이 관찰된다.

2. 차원 간 상관관계 추이

다음으로 차원 간 상관관계의 추이를 분석했다. 모든 조합에서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한 차원의 불평등이 다른 차원과 별도로 생성되고, 재생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일한 예외가 건강과 자산의 상관관계였다. 건강과 자산의 상관관계는 2010년대에는 상관계수가 낮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관관계가 사라지거나,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기도 했다. 즉, 자산을 많이 가질수록 건강한 경향이 약하게 있었지만, 반대로 건강이 안좋을수록 자산은 더 많은 경향도 일부 관찰됐다.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는 (건강 수준이 상대적으로 안좋은) 노인 가구에서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한 결과로 풀이된다. 참고로,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개인의 자산과 소득은 균등화한 자산 및 소득의 값을 개인에게 부여한 결과였다는 점도 확인해 둔다.

[표 6] 차원간 상관관계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교육	0.36	0.36	0.31	0.24	0.13	0.30	0.33	0.30	0.34	0.35	0.31	0.39	0.37
소득/교육(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소득/건강	0.28	0.27	0.24	0.20	0.08	0.25	0.27	0.25	0.26	0.29	0.27	0.34	0.32
소득/건강(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소득/자산	0.38	0.37	0.29	0.25	0.11	0.31	0.32	0.30	0.34	0.25	0.31	0.33	0.30
소득/자산(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건강	0.51	0.50	0.52	0.49	0.49	0.49	0.48	0.48	0.48	0.45	0.46	0.48	0.47
교육/건강(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자산	0.07	0.08	0.08	0.07	0.06	0.07	0.08	0.09	0.08	0.09	0.05	0.02	0.07
교육/자산(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7	0.00
건강/자산	0.03	0.04	0.04	0.05	0.04	0.02	0.05	0.03	0.02	0.04	-0.01	-0.06	0.04
건강/자산(p)	0.00	0.00	0.00	0.00	0.00	0.07	0.00	0.00	0.05	0.00	0.51	0.00	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3. 다차원 불평등 추이 및 차원별 기여도

다음으로 네가지 차원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Araar(2009)의 Hybrid Multidimensional Index(H-MDI)에 근거해서 산출했다. MDI 지수는 지난 2011년 0.176에서 경향적으로 증가해서 2023년에는 0.190까지 증가했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산출에서 영역별 불평등 및 소득과의 집중계수가 기여한 정도를 보면, 소득, 교육, 건강 세가지 영역의 기여도가 모두 하락한 반면, 자산의 기여도가 유일하게 상승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득의 기여는 38.9%에서 35.2%로, 교육은 20.9%에서 16.0%로, 건강은 14.7%에

서 13.1%로 줄었다. <표 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세 영역에서 지니계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완만하게 감소한 경향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자산 불평등이 다차원 불평등 지수값에 미치는 기여도는 12년 사이에 25.5%에서 35.8%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한국에서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증가는 자산불평등 심화가 주된 원인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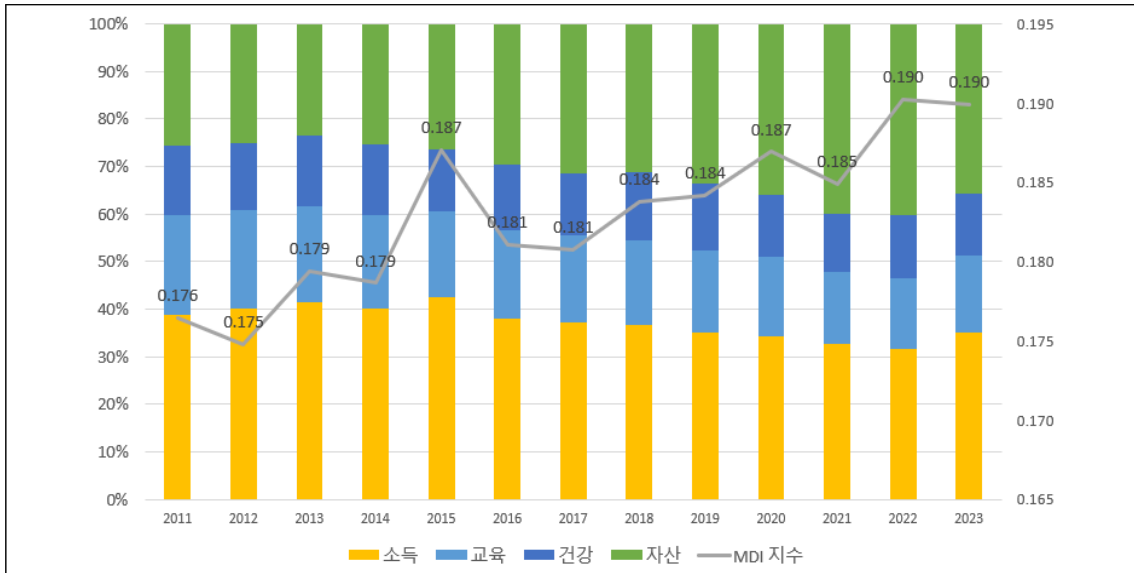
[표 7]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76	0.175	0.179	0.179	0.187	0.181	0.181	0.184	0.184	0.187	0.185	0.190	0.190
소득	38.9	40.1	41.6	40.3	42.6	38.1	37.4	36.8	35.2	34.3	32.7	31.7	35.2
교육	20.9	20.8	20.2	19.4	18.1	18.6	18.1	17.8	17.2	16.7	15.2	14.9	16.0
건강	14.7	14.2	14.7	14.9	13.0	13.8	13.2	14.2	14.0	13.2	12.1	13.2	13.1
자산	25.5	25.0	23.6	25.4	26.3	29.6	31.3	31.2	33.6	35.8	40.0	40.3	35.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3]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4.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추이

다음으로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노인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가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점이 눈에 띄었다. 분석 대상 시기 동안 노인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일관되게 0.2 수준을 넘어섰다. 노인 세대에서 다차

원 불평등의 기여도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자산(31.9%)과 소득(31.5%)의 비중이 높았지만, 다른 세대와 비교하면 교육(24.2%)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세대보다 한세대 어린 연령대인 586세대에서 교육의 기여도가 절반 수준인 13.0%인 점과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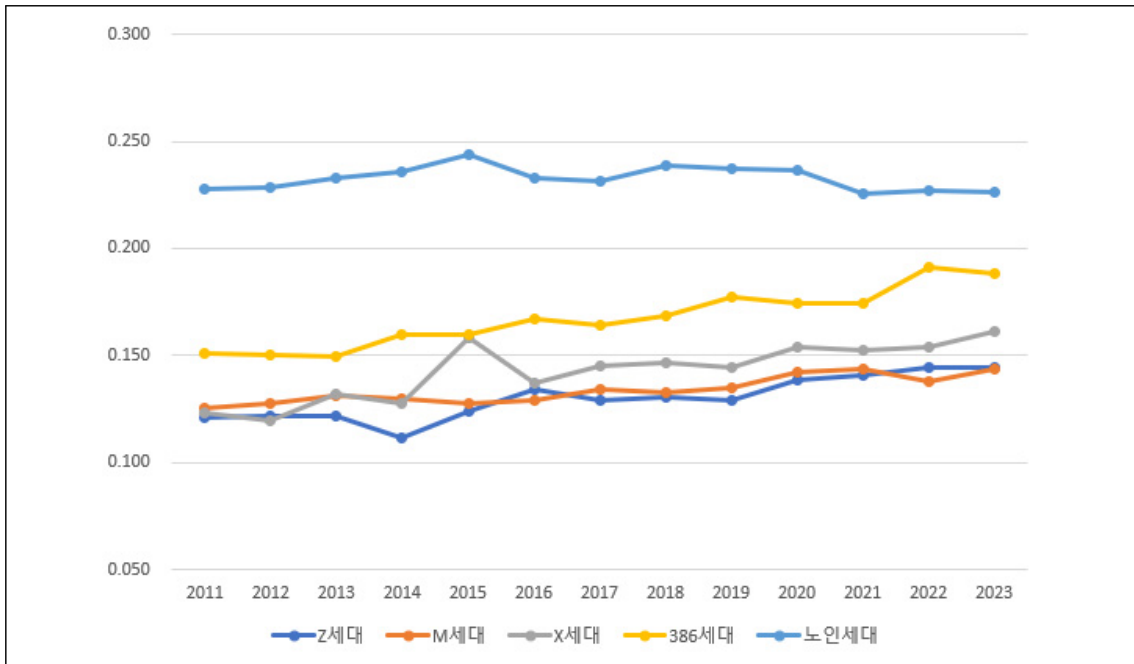
[표 8]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변동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Z세대	0.121	0.122	0.122	0.111	0.124	0.134	0.129	0.131	0.129	0.139	0.141	0.144	0.145
M세대	0.125	0.127	0.131	0.130	0.128	0.129	0.134	0.133	0.135	0.142	0.144	0.138	0.144
X세대	0.123	0.120	0.132	0.128	0.158	0.137	0.145	0.146	0.145	0.154	0.152	0.154	0.161
586세대	0.151	0.150	0.149	0.160	0.160	0.167	0.164	0.168	0.177	0.174	0.174	0.191	0.188
노인세대	0.228	0.228	0.233	0.236	0.244	0.233	0.232	0.239	0.237	0.237	0.226	0.227	0.2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4]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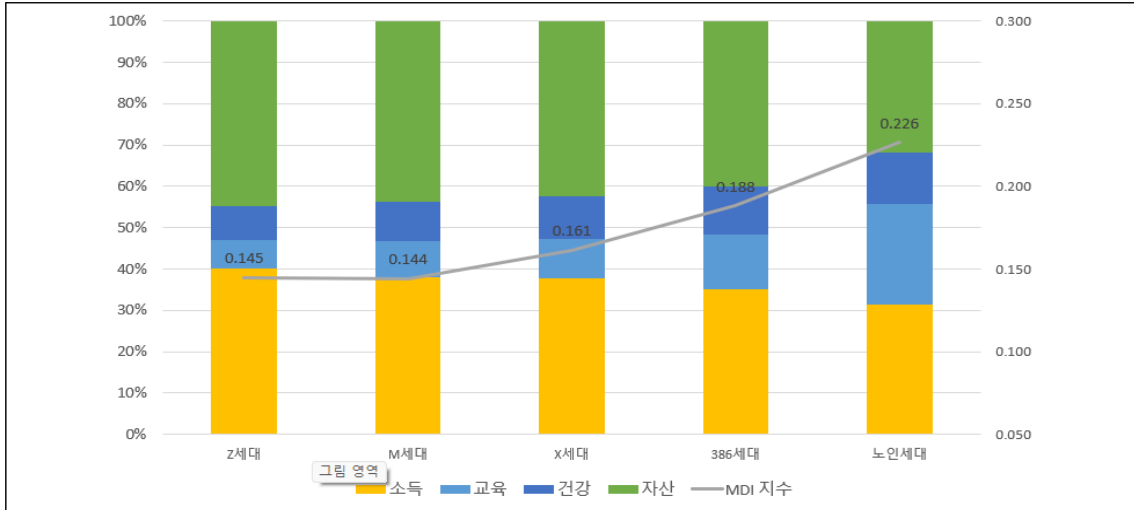
(단위: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5]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2023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노인 세대 가운데 가장 어린 1960년생이 대학을 입학할 즈음인 1980년 대학진학률이 11.4%였지만, 10년과 20년이 각각 지난 1990년과 2000년에는 비율이 23.6%와 52.5%로 두배씩 늘어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국가데이터처, 2025). 양적 측면에서 교육의 불평등이 매우 빠르게 해소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보고서의 5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노인 세대 다음으로는 586세대에서 불평등 지수가 높았다. 이들 세대는 X세대와 더불어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다차원 불평등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특징을 나타낸다. 두 세대는 2011~2023년 사이 지수가 각각 0.037과 0.038 늘었다. 같은 기간 노인세대의 지수는 0.002 감소했다. 다른 젊은 세대에서는 지수가 완만하게 증가했다. 젊은 세대에서는 연령대가 늘어날수록 교육과 건강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소득과 자산의 기여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여도가 상대적이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는 있다.

5.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다음으로 세대별로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추이를 살펴보겠다. 먼저 가장 젊은 Z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0.121에서 0.145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지수는 2014년까지는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차원별 기여도의 추이를 보면, 소득은 일정한 등락이 있었지만, 대체로 유지됐다. 자산의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자산의 낙폭이 큰 편이었는데,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등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은 가구 균등화한 값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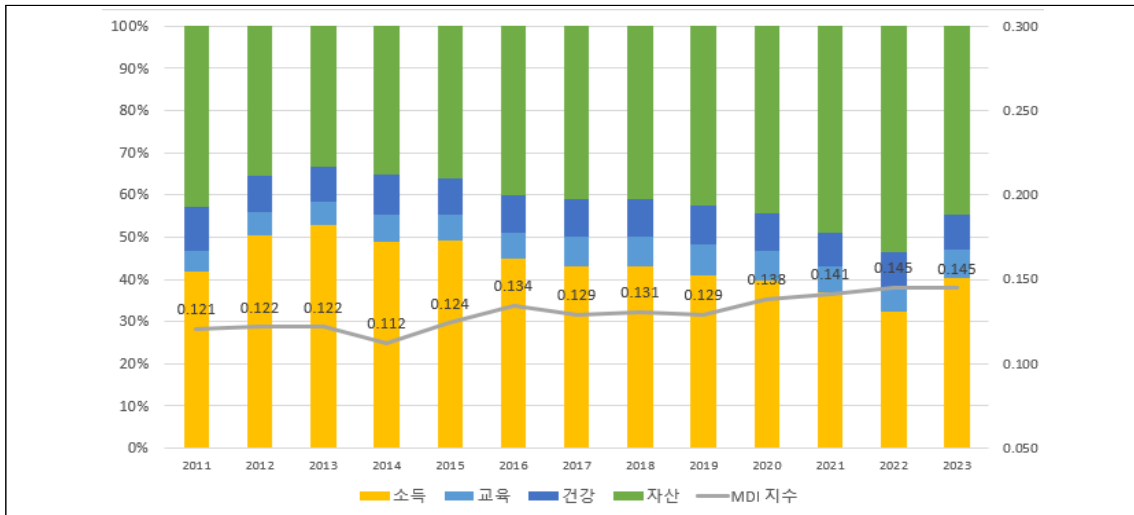
(1) Z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21	0.122	0.122	0.112	0.124	0.134	0.129	0.131	0.129	0.138	0.141	0.145	0.145
소득	41.7	50.4	52.9	49.0	49.3	44.8	43.0	43.0	41.0	39.8	37.0	32.4	40.2
교육	5.1	5.6	5.4	6.2	6.1	6.3	7.1	7.2	7.4	7.0	6.1	5.7	6.9
건강	10.4	8.4	8.4	9.7	8.5	8.7	9.1	8.7	9.1	8.8	7.8	8.4	8.2
자산	42.8	35.6	33.3	35.1	36.1	40.1	40.9	41.1	42.5	44.4	49.1	53.5	4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6] Z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2) M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M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추이도 살펴봤다. 여기서 M세대는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로 81~90년 출생 세대다. 2025년 기준으로는 나이가 만 35~44세의 중년 세대다. 지난 15년 사이 경제적인 독립이나 가구 분리와 같은 경험이 가장 자주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대다. 그럼에도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0.018 상승했다. 노인 세대를 제외하고는 지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교육과 건강이 기여도는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됐다. 특징적인 점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소득의 기여도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자산의 기여도는 늘었다는 점이다. 불평등지수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소득에서의 불평등 완화를 자산에서의 불평등 심화가 상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기간 동안 노동시

장 소득 분배 및 이전 및 조세를 통한 재분배가 꾸준히 완화했던 결과와 자산 불평등이 심화한 결과가 M세대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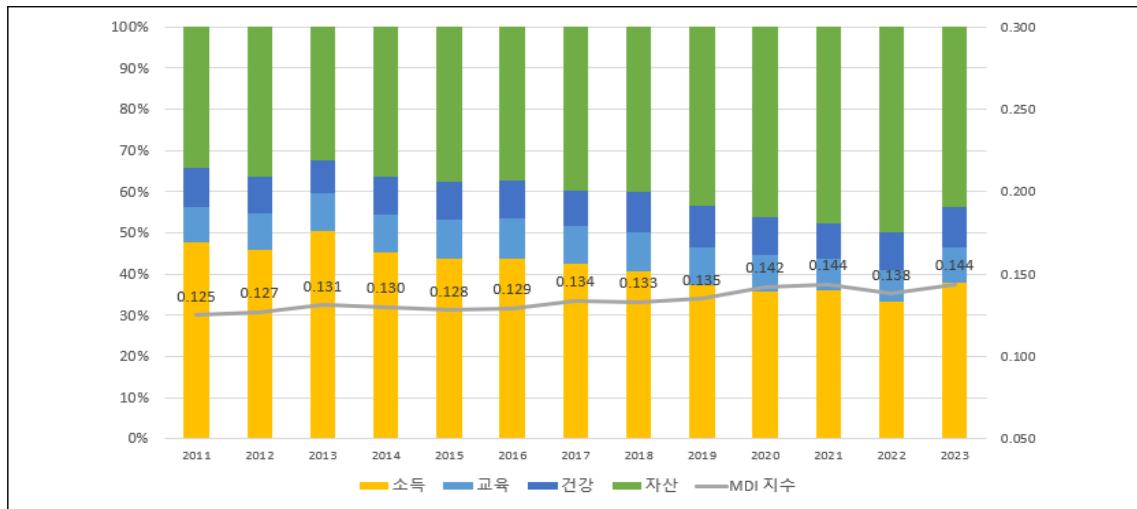
[표 10] M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25	0.127	0.131	0.130	0.128	0.129	0.134	0.133	0.135	0.142	0.144	0.138	0.144
소득	47.6	45.8	50.5	45.2	43.7	43.8	42.4	40.7	37.2	35.9	35.9	33.4	38.1
교육	8.7	9.1	9.1	9.4	9.6	9.8	9.3	9.4	9.4	8.9	7.9	7.7	8.6
건강	9.4	8.7	8.2	9.2	9.0	9.0	8.7	9.9	9.9	9.0	8.5	9.2	9.6
자산	34.3	36.5	32.2	36.3	37.7	37.4	39.6	40.0	43.5	46.3	47.6	49.7	4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7] M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3) X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X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추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X세대는 70년대생들이다. 입직 시기에 상당수가 90년대말 IMF 경제 위기를 겪었던 세대다. 나이로 보면, 이 세대의 중간 나이대인 75년생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36~50세의 연령을 거쳐왔다. 근로연령대의 핵심 기간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대의 특징 때문에, 보고서의 3장에서 살펴본, ‘소득 불평등의 완화와 자산 불평등의 심화’가 X세대에서 가장 분명하게 관찰됐다. MDI 지수에서 소득의 기여도가 48.3%에서 37.7%로 10%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자산의 기여도는 28.3%에서 42.5%로 대폭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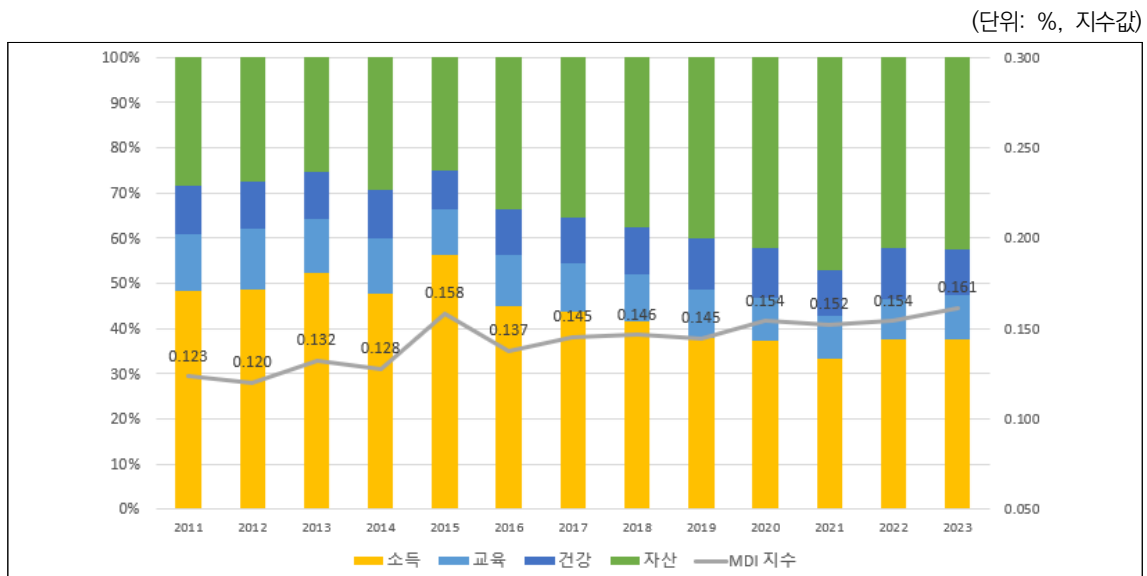
이들 세대에서도 교육 불평등의 기여도는 일부 하락했다. 이들 세대가 초·중·고·대학을 거치는 동안, 한국에서는 교육의 양적인 불평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거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M세대에서는 교육의 기여도가 낮게, 변동 없이 유지됐다.

[표 11] X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23	0.120	0.132	0.128	0.158	0.137	0.145	0.146	0.145	0.154	0.152	0.154	0.161
소득	48.3	48.8	52.3	47.7	56.4	45.0	43.8	41.5	37.9	37.2	33.3	37.6	37.7
교육	12.5	13.3	12.0	12.2	9.9	11.3	10.5	10.5	10.6	9.6	9.5	9.1	9.6
건강	10.9	10.5	10.4	10.9	8.6	10.1	10.3	10.5	11.4	11.2	10.3	11.3	10.3
자산	28.3	27.5	25.3	29.2	25.2	33.6	35.4	37.5	40.1	42.0	47.0	42.1	4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8] X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4) 586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586세대도 다차원 불평등 지수 추이의 변화 폭이 컸다. 586세대는 60년대생들이다. 세대의 중간 나이대인 65년생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46세에서 60세로 연령이 바뀌었다. 앞서 보고서의 3장에서 살펴본 ‘소득 불평등의 완화와 자산 불평등의 심화’의 경향도 관찰됐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이 X세대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건강이 기여도는 큰 변화없이 유지됐다. 교육의 기여도도 13%를 유지하면서 큰 변화가 없었다. 교육의 기여도가

2023년 기준으로 24.2%(노인세대), 13.0%(586세대), 9.6%(X세대), 8.6%(M세대), 6.9%(Z세대)로 점감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반면, 자산의 기여도는 2023년 기준으로 전세대에 걸쳐서 40%를 전후했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비중이 점증하는 추세도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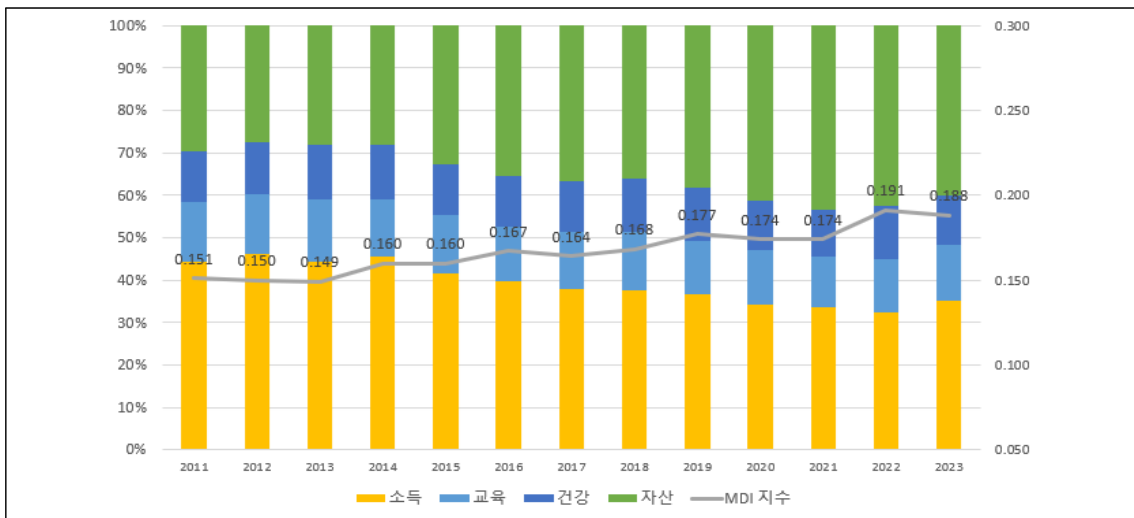
[표 12] 586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151	0.150	0.149	0.160	0.160	0.167	0.164	0.168	0.177	0.174	0.174	0.191	0.188
소득	44.4	46.2	44.5	45.6	41.7	39.6	38.0	37.7	36.7	34.1	33.5	32.2	35.2
교육	13.9	14.2	14.6	13.3	13.6	13.0	13.3	13.5	12.6	13.0	12.2	12.6	13.0
건강	11.9	12.0	12.8	13.1	12.0	12.0	11.9	12.8	12.5	11.6	11.0	12.6	11.9
자산	29.8	27.6	28.2	28.0	32.7	35.4	36.8	36.0	38.2	41.2	43.3	42.6	39.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9] 586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5) 노인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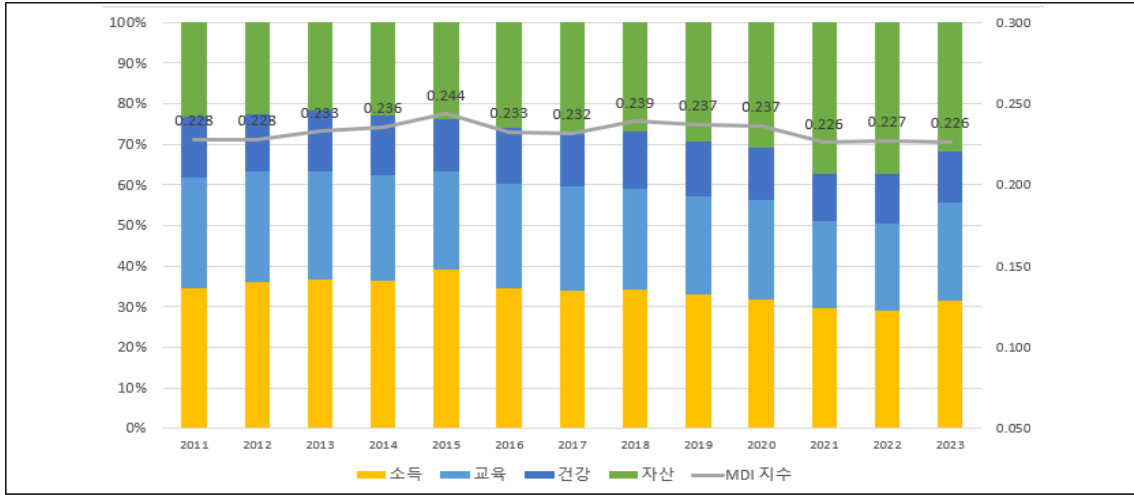
[표 13] 노인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DI 지수	0.228	0.228	0.233	0.236	0.244	0.233	0.232	0.239	0.237	0.237	0.226	0.227	0.226
소득	34.6	35.9	36.6	36.5	39.0	34.5	34.1	34.2	32.9	31.8	29.7	29.0	31.5
교육	27.1	27.3	26.8	25.8	24.4	25.8	25.7	25.0	24.4	24.4	21.6	21.4	24.2
건강	15.0	14.1	14.9	14.7	12.8	13.8	12.6	13.8	13.3	12.9	11.5	12.3	12.5
자산	23.2	22.7	21.8	23.0	23.7	25.9	27.6	27.0	29.4	30.9	37.3	37.3	31.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그림 10] 노인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지수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연도

마지막으로 노인세대를 보겠다. 60년 이전 출생자들이다. 예를 들어, 55년생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56세에서 70세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다른 세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MDI 지수가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점이다.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도 소폭 감소했다. 보고서의 3장에서 관찰된 소득 불평등 완화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들 세대의 은퇴에 따른 효과였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의 기여도는 큰 변화 없이 20%대를 유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건강의 기여도가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들 세대가 고령화를 거치면서 건강 수준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배치된다. 4장에서 노인 집단의 우울감이나 우울장애 유병률에서 노인 집단에서 뚜렷한 완화가 이뤄진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횟수가 건강 불평등 변수였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다차원 불평등 현황을 살펴봤다. 201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은 노동 시장 분배 및 이전 및 조세의 재분배 효과로 상당히 호전됐다. 시장소득의 분배를 급격한 노령화가 악화시켰던 점까지 고려하면(이원진 외, 2022), 한국에서 소득 재분배 완화는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이원진 외(2022)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화, 가구 규모 감소와 같은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통제하면 대체로 2010년대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됐고, 가구 단위의 시장소득 분배도 개선됐다. 물론, 앞으로도 소득 분배 지

표가 완화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시장 및 가처분소득 분배 지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배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2010년대 이후 분배 지표 개선은 노동시장 정책 및 재분배 정책의 효과도 있었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자국중심주의, 지정학적 갈등은 대외 환경의 시계를 흐리고 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교란, 관세 전쟁의 여파로 인한 충격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적극적인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자산 불평등의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보고서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 한국 사회에서 계급 이동성을 가로막고, 건강한 노동 윤리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산 불평등이 부상하고 있다.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한다면, 또 자산이 부의 대물림을 낳는 주된 경로가 된다면 건강한 노동시장이 형성되기도 어렵고, 건강한 복지국가가 성장할 수도 없다. 더욱이, 부모나 조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기회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자산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Piketty 등의 학자나 정의당 등 일부 정당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상속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현금 자산의 부여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있다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시범적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고, 용처를 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한정하는 등의 안도 검토할 수 있다.

더불어,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근거, 즉 데이터가 요구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의 집적 및 활용에 관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 위에서 인공지능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불평등 문제의 분석과 대응을 위해서도 데이터 집적·연계·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누적한 행정데이터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및 활용은 전세계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김기태외 2024).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중심에 둔 정책 제언을 아래와 같이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데이터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 입력 데이터의 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빅데이터 활용에서도 “Garbage in, garbage out” 문제가 상시적으로 대두된다. 불평등 현황의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포괄적이면서 정확한

행정 데이터가 필수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정제·검증의 표준 운영과 품질관리 전담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데이터 통합·연계·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연계 여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결합키 활용 제한과 부처 간 소극적 공개 관행이 통합을 가로막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에 근거한 행정데이터 수집을 실효화하고, 부처 간 데이터 연계·공유를 위한 법·기술·관리 표준을 정비하여 분석과 집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표준화·단순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의 테이블은 반대하지만 실제 활용은 일부 칼럼에 집중되어 비효율이 크다. 기관별 상이한 포맷·정의·주기를 정합화하고, 공통 데이터 사전과 인터페이스 표준을 구축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데이터 보안·안전을 고도화해야 한다. 전수(全數)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위험을 수반한다. 북유럽의 경험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활용의 균형을 제도화하는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라 알고리즘 편향 최소화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호주의 로보데트(Robodebt) 사례는 데이터 매칭 알고리즘의 과신·과의존이 대규모 오류·피해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기태, 2025). 모델 설계·학습·배포 전 과정의 편향 점검, 설명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사후 모니터링과 중대사고 보고·시정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더불어, 건강 영역에서 데이터 관리에 관한 정책 제언도 시도하겠다. 첫째, 건강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살펴봤듯,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득 변수는 한 문항으로 측정되고 있어 해석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사회보장정보원, 질병관리청 등이 소득 자료를 연계한다면 조사 표본과 행정자료 결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년월일, 성별, 이름을 활용한 결합률이 조사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고 비소비지출(사회보장기여금, 세금)에 대한 자료, 공적이전 소득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강 불평등 파악과 해소가 국가의 주요 아젠다라면 우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체의 소득 자료를 현재보다 풍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주요 정신건강 지표의 측정 주기를 1년 단위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우울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울은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바, 국가 차원에서 대표성 있는 강건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 규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생활상태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석에서 볼 수 있듯 현재의 표본 규모를 통해서는 연령과 소득, 연령과 지역과 같이 두 가지 범주를 함께 고려하여 건강상태, 건강행태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물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표본 규모가 크지만 앞에서 살펴봤듯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고 전국 대표성을 지닌 조사는 아니므로 전국 대표성을 지닌 통계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우울과 범불안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풍부히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자료를 풀링하여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울과 범불안장애가 조사된 연도가 많지 않고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풀링한 자료로는 건강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시계열로 살펴볼 수 없다는 점도 첨언해 둔다.

넷째, 질병관리청은 2025년 7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주민등록번호로 연계하여 생산한 자료를 갱신·공개 한 바 있다(질병관리청, 2025, 7. 21).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조사에서도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다른 자료들과의 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결합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교육 분야에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시도했다. 먼저, 사회 전체의 교육 불평등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각 개인의 최종학력과 해당 학력의 질적 수준(대학순위 등)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현재 한국노동패널(KLIPS)이 유일하게 이를 일부 포함하지만, 교육 불평등의 정밀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체 사회구성원’보다는 ‘대학입시 불평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관심사는 대학진학 중심이므로, 연도별 불평등 지수는 해당 연도의 대학입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입시 결과를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횡단면 자료(repeated cross-section)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가 유일하였으나, 조사연도의 6-8년 이전 시점 정보만 획득 가능하고, 2019년을 마지막으로 종결됐다.

다음으로,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정밀한 교육 불평등 지수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이미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자료의 부재’가 아니라, ‘기존 행정정보의 공개와 접근성’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및 교과학습 발달상황 자료가 필요하다. 향후 교육 불평등 지수 개발은 새로운 조사 구축이 아니라, 기존 행정정보의 활용 체계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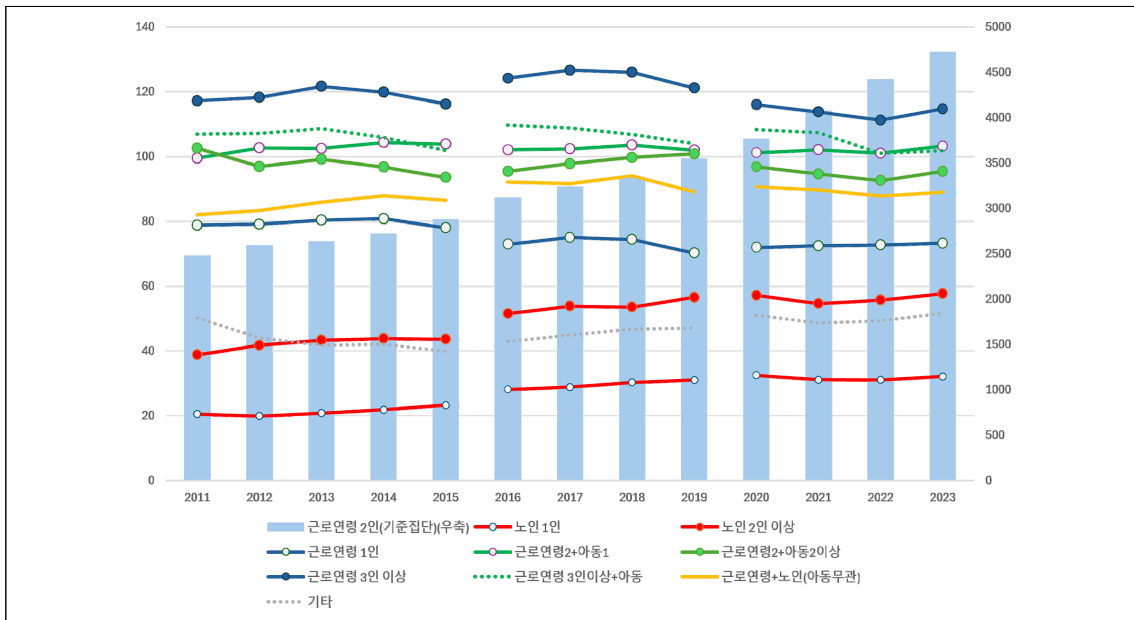
VI¹ 부록

보고서 안의 차원별 불평등 관련 주요 그림들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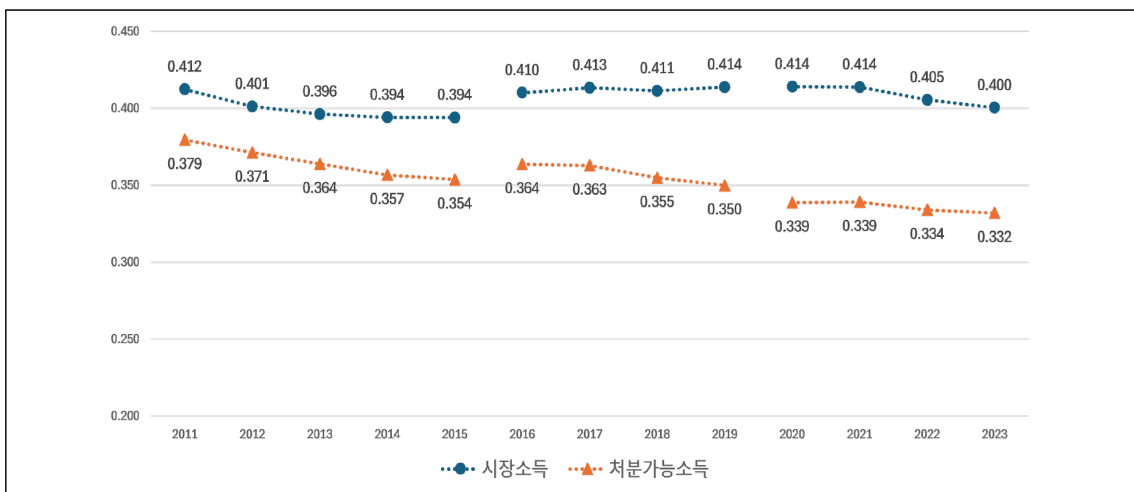
1. 소득 및 자산 불평등

[그림 III-1] 가구 유형(세분류)별 처분가능소득 격차 변화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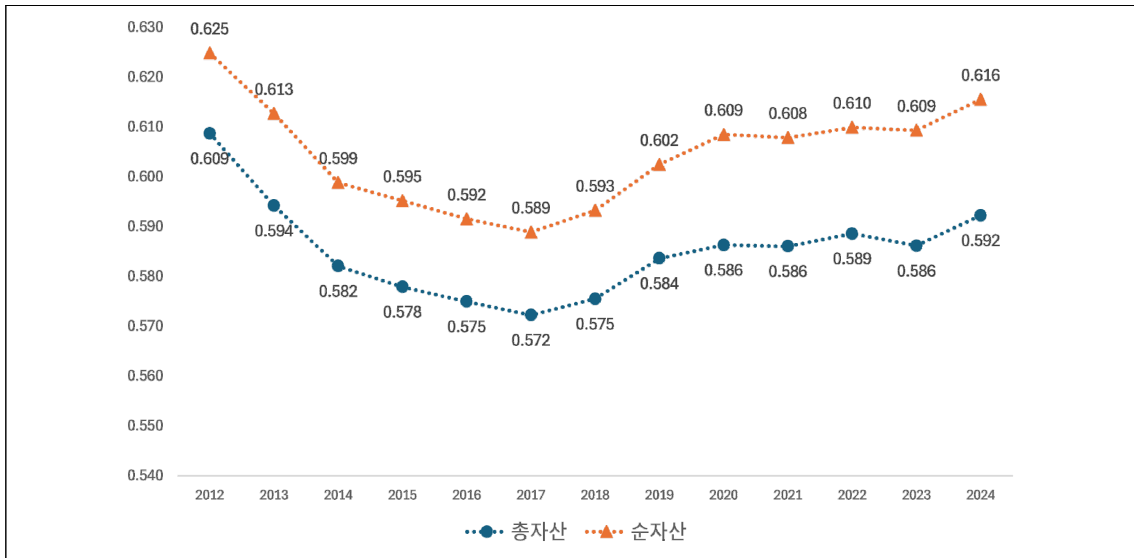


[그림 III-11]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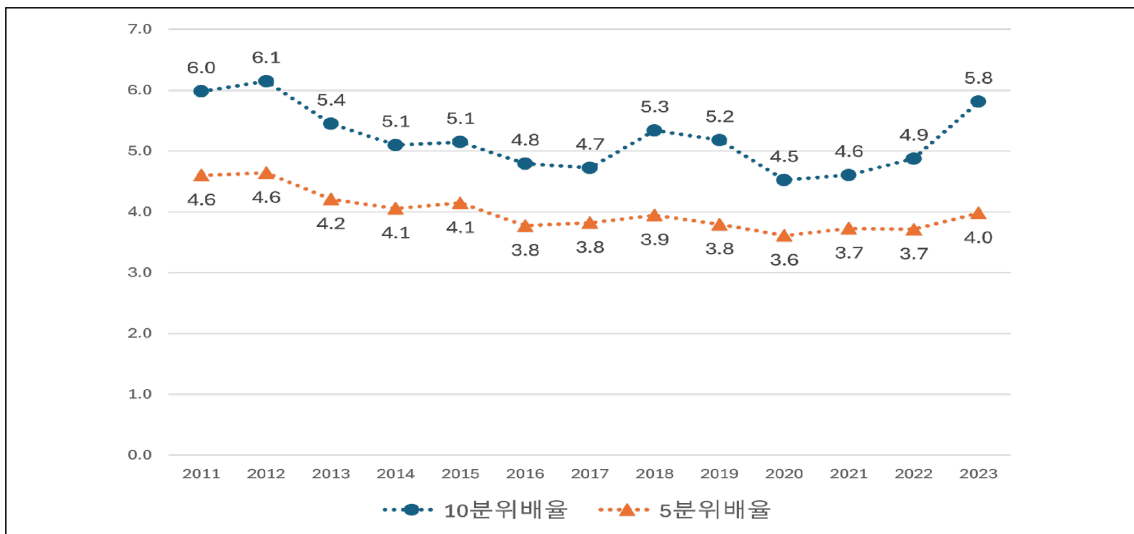
[그림 III-23] 자산의 지니계수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그림 III-28] 소득 분위간 순자산 배율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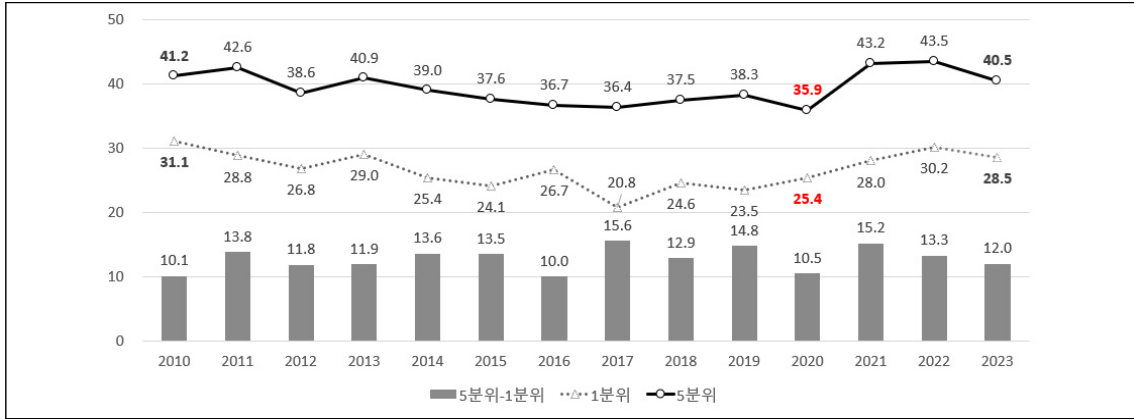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연도.

2. 건강 불평등

[그림 IV-3] 소득분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단위: %, %p)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2025.09.04,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I2

[표 IV-12] 연령별 우울장애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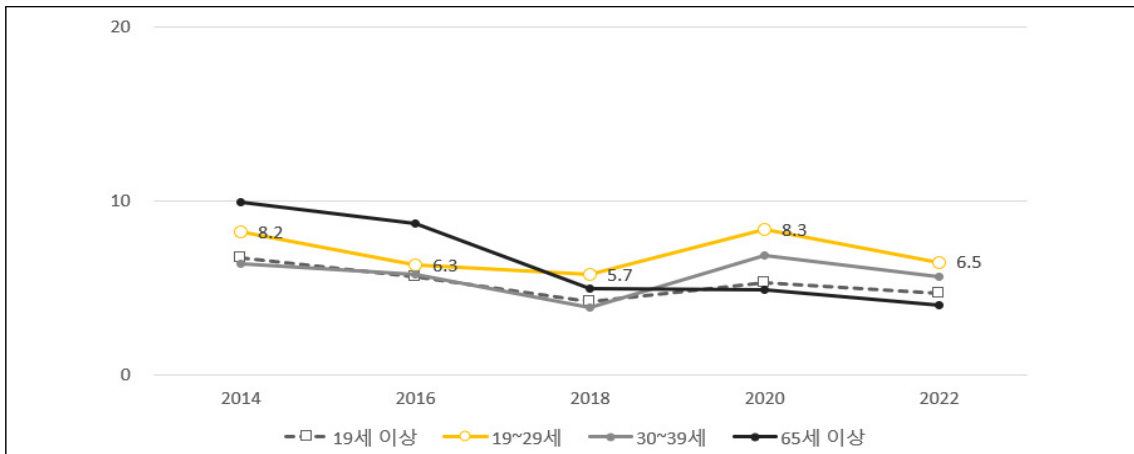
(단위: %)

	2014	2016	2018	2020	2022
19세 이상	6.7	5.6	4.2	5.3	4.7
19~29세	8.2	6.3	5.7	8.3	6.5
30~39세	6.4	5.8	3.9	6.8	5.6
65세 이상	9.9	8.7	5.0	4.9	4.0

주: 연령표준화 이전 값임.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국민건강통계.

[그림 IV-14] 연령별 우울장애 유병률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표 IV-13] 1인 가구와 비1인 가구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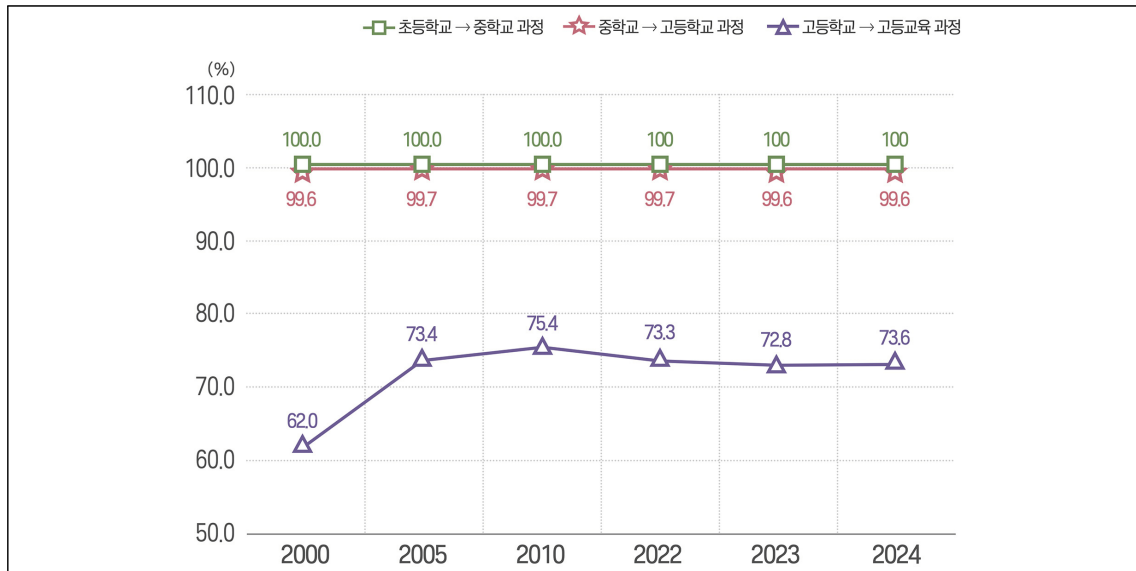
(단위: %)

	2014	2016	2018	2020	2022
1인 가구	14.5	11.8	7.9	10.2	7.9
비1인 가구	6.0	5.0	3.8	4.7	4.2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3. 교육 불평등

[그림 V-4] 교육단계별 진학률, 2000-202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간추린 교육통계」, 1998.

[그림 V-10] 입학년도별 가구소득 기준 대학입학의 집중도

